

칼럼



김윤호 주필, 행정학박사, 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미얀마 대학살에 규탄 성명 밖에 할 일이 없는가

지난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미얀마의 실질적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구금하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민 아웅 흘라잉 국방군 총사령관에게 권력을 이양시킨 군부 쿠데타를 일으켰다.

미얀마 전역에서 반군부 저항 운동이 벌어졌던 지난 두 달 새 가장 많은 희생자가 미얀마 군인의 날인 3월 27일 발생했다. 이날 군부 독재에 저항하기 위해 시위에 나선 시민들을 향해 군경이 무차별 총격을 가해 최소 114명이 목숨을 잃었다. 중부 지역 미얀마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군경이 우리를 새나 닭처럼 죽이고 있다. 우리의 집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군부가 무너질 때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날 수도 네피도에서 열린 '국군의 날' 군사 퍼레이드에는 러시아, 중국,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베트남, 라오스, 태국 등의 대표단이 참석해서 군부와 우호를 과시했다. 특히 러시아에서는 알렉산더 포민 국방장관이 참여했다.

미얀마 군부의 폭력성은 극에 달하고 있다. 주택가에 총탄을 쏘아 5세 유아를 숨지게 하고 머리를 쏘는 조준 사격과 참수(斬首)도 서슴지 않는다. 시민 114명이 군경의 유

혈 진압으로 숨지던 날, 군 장성들은 흰 제복에 나비넥타이 차림으로 파티를 했다.

2월 반군부 시위 이후 민간인 사망자는 550명이고 어린이도 43명이다. 미국이 미얀마와 교역협정을 중단하기로 했지만 미얀마 군부를 한 목소리로 압박하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는 아직 없다. 각국의 계산이 뒤엉켜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홀로 더 밀어붙이면 미얀마가 중국 편이 될까 걱정이다. 중국도 신(新)실크로드 전략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미얀마 군부와 적지고 싶지 않다. 미얀마가 가입해 있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다른 회원국들도 정치 상황이 혼란해 미얀마를 도울 처지가 못 된다. 날마다 수많은 시민이 죄없이 죽어가고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은 자기 나라 국익을 저울질하고 있고, 주변국들은 제 코가 석 자여서 옆을 들여다 볼 겨를이 없다. 이것이 비정한 국제정세이다.

규탄의 목소리만 내는 국제사회 대응은 군부를 압박하는 효과가 없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상임이사국이면서 미얀마 군부에 우호적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결의안

조차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제76회 미얀마 군인의 날은 테러와 불법예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어린이를 포함한 비무장 시민들에 대한 학살은 옹호할 수 없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미얀마의 한 시민이 트위터에 '미얀마를 구하라' '여성과 어린이를 그만 죽여라' '우리는 R2P가 필요하다'는 팻말을 올렸다. 유엔의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을 일컫는 R2P를 통해 국제사회에 도움을 촉구하고 있다. R2P는 국가가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반인류 범죄 등 4대 범죄로부터 자국민을 범죄에 R2P를 적용하지는 주장이다. 3월 31일 열린 긴급 유엔 안보리가 R2P를 적용해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 또는 회복'하기 위한 무력행사를 허용하는 유엔 헌장 제

7장의 발동을 논의조차 못했다. 심지어 중국의 반대로 규탄 성명 발표도 못했다. 현재 유엔은 '식물유엔'이 되어 있다. 군부와 대치하고 있는 미얀마 민주진영 인사들이 구성한 임시 정부인 미얀마 연방의회 대표위원회(CRPH)가 소수 무장세력들과 손잡고 '국가통합정부(National unity government)'를 수립했다. 군부와 카렌 민족해방군 등 무장세력 간의 국지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전(內戰)으로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 소수민족 무장반군인 카렌민족연합(KNU)은 태국 국경 지역에서 미얀마군 초소를 습격해 10명을 사살하고, 미얀마군 전투기는 카렌족 마을을 공격해서 민간인들을 죽였다. 우리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 시민들을 총칼로 학살했던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겪었기에, 미얀마 시민 학살에 엄청난 분노와 강고(強固)한 연대를 보인다. 1950년 6월부터 3년 간, 전 국토가 초토화되는 동족 상잔(相殘)의 참극을 겪었기에, 내전으로 가고 있는 미얀마를 걱정한다. 우리 정부는 여행 경고지역 지정과 교민 철수 대책 수립 밖에 할 일이 없는 것인가. 세계 평화와 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유엔은 결의안 하나도 채택 못하고 언제까지 무차별 학살을 수수방관만 하는 식물유엔으로 남을 것인가. 유엔 사무총장이 즉각 현장으로 달려가서 군부 실세를 만나서 학살을 멈추게 할 수는 없는 것인가. 난세(亂世)에 영웅이 난다. 고난에 처한 미얀마를 구하고 방황하는 인류를 구원할 진정한 영웅은 아직 오지 않았다 보다.

기고

민관 공동감시 체계 정착으로 소방시설 불법행위 막아야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SNS가 활성화됨에 따라 시민들의 공익 신고가 늘고 있다. [국민신문고 신고 건수 107만건(2011년) → 957만건(2020년)] 소방청의 '119신고',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경찰청의 '스마트국민제보' 등 시민들이 간단하게 제보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운영하여 민관 공동감시 체계 정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순천소방서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연중 운영하며,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시설 이상 7개 대상이 해당된다.

거주지 제한없이 누구나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순천소방서 홈페이지 등 형식 제한없이 신고 가능하다. 신고대상 행위는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일체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여 상시 개방된 상태로 사용하는 행위 ▲피난시설(방화셔터 등)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최초 신고시에는 5만원(현금 또는 전통시장 은누리상품권),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신고 시 회당 5만원에 상당하는 포상품물이 지급되며, 같은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최대 월 30만원, 연 300만원이다.

가명으로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순천소방서는 소방시설점검(작



하수철 순천소방서 서장

동 기능 점검, 종합정밀점검) 보완사항 발생 시 조치 명령, 과태료·벌금 부과, 소방특별조사반 불시단속, 중점시설 안전점검건설링, 시기별 소방안전대책 추진, 합동소방훈련 등을 통해 관내 건축물 소방시설 관리상태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관내 대상물이 많아(6,065개소) 시민들의 제보와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비상구의 경우 생활상의 편의를 위해 개방된 상태로 사용할 경우 화재 발생 시 화염과 연기가 상층부로 급속히 진행하게 된다. 한 개의 층에서 끝날 화재가 전층으로 확대되고, 윗층에 있던 사람들은 대피를 할 수 없음에도 피난대피로가 화염과 연기로 인해 차단되어 인명·재산피해를 키우게 된다.

소방시설은 수도·전기·가스시설과 같이 필수 시설임을 인지하여 기능이상 발생할 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관계자가 비용발생이 부담되어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유지한다면 건물물관계인 뿐만 아니라 건물을 방문하는 불특정다수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불법행위는 반드시 교정되어야 한다.

순천·구례 주민여러분의 사적 인 정(情)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잠시 접어두시고, 생애·자연도시 순천시 구례군을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통합감시 체계 구축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살예방센터' 적극 활용해야

전 세계에서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9월10일, 세계자살예방의 날로 제정하였다.

OECD 가입국 중 한국은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을 정도로 한 해에 1만5000명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 하루에 43명, 33분마다 1명이 자

살을 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자살은 더 이상 삶에 대한 희망이 없고, 의지도 없는 고독함 속에서 선택하는 행동이기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요즘 사회와 같이 극심한 경쟁과 수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현대인은 자살의 위험성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자살을 수치스럽게 느끼고, 이를 숨기려고 한다.

한편으로는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자신의 상황을 누군가 알아주고 도움을 손길을 내밀어 주길 바라고 있다.

주변 사람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면 분명 자살을 막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있어주고, 진심어린 걱정과 관심으로 자살하려는 마음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국에 설립되어 있는 자살예방센터(1577-0199, 1588-9191, 129)에서 전화상담 뿐만 아니라 직접 상담이 가능하고, 자살을 극복하고 희망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 희망 메시지 등 많은 도움의 정보가 있다.

혹시라도 주변에서 혼자서 힘들어하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고, 나 자신이 죽고 싶을 만큼 힘들다면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길 바란다. 이재복/고흥경찰서읍내파출소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213스카이랜드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욱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장평 13길 19 (061) 727-3123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인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